

장관서 피의자로... 조국 사태의 끝은?

강제수사 79일만에 비공개 출석 정교수 사모펀드 투자 개입 여부 딸·아들 증명서 발급 관여 조사



지난달 14일 사의를 밝히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는 조국 전 장관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했다. 지난 8월 27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비위 행위 강제수사가 시작된 뒤 79일 만에, 장관직을 사퇴하고부터는 한 달 만의 소환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을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에 개입했는지, 자녀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에 관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WF

M)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것을 두고 조 전 장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1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코스닥 WFM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얻어 이 회사 주식 14만4304주를 7억1260만원에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억7400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파악했다.

정 교수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WFM 주식을 매입한 혐의는 조 전 장관의 뇌물 혐의와 연결될 수 있다. 영어교육업체인 WFM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2차전지 사업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주식을 싸게 팔았거나 미공개정보이용을 넘겼다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WFM 주식 12만주를 6억원에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원이 이체된 정황을 잡고, 조 전 장관 부부의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는 등 조 전 장관이 주식 매입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실제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에게 5000만원을 이체한 시기가 민정수석이었던 때였고, 거래는 청와대 근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알아냈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5000만원이 이체된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이 청와대 ATM기에서 5000만원 송금 사실은 변호인에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5000만원의 용처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서울시

선진 돌봄도시 위한 엑스포

서울시는 18~19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19 서울국제돌봄엑스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와 함께, 서울의 새로운 돌봄'을 주제로 서울 돌봄 정책의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오후 5시 개막식 연설에서 서울시 돌봄 사업의 성과와 향후 방향을 발표하고 '선진 돌봄 도시'로의 발전을 약속한다.

전시회에는 서울시 15개 부서와 25개 자치구, 호놀룰루·밴쿠버·에테토리 등 6개 해외 도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유니세프 한국 위원회 등 10개 기관, 민간 협회 및 기업들이 참여한다.

/김현정 기자

法, 직수부 37곳 폐지... 보고규칙 개정 검토 '아이존' 수요 느는데 임대료 부담에 공급 ↓

(직접수사부서)

연말까지 반부패수사부 2곳 포함 서울중앙, 대구·광주지검만 남아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에서 특별수사부 4곳을 폐지한 데 이어 연말까지 직접수사 부서 37곳을 추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일 청와대에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인 부서명까지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41개 부서를 대상으로 폐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특수부 4곳이 형사부로 전환됐기 때문에 사실상 37곳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전날야야 대검찰청에 알리고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폐지 검토 대상에 포함된 부서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 2곳을 비롯해 공공수사부(옛 공간부), 외사부, 강력부도 들어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방위사업수사부와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 전문성 차원에서 특화시킨 부서도 대상이다.

법무부 안대로 전체 41개 부서가 모두 폐지되면 앞으로 직접수사 부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과 대구·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 등 4곳만 남는다.

법무부는 전날 검찰에 중요 사건은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장관에게 사전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사무보고규칙'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현경 기자

(아동·청소년 심리치료기관)

서울시, 2006년부터 치료프로그램 개별치료 아동 수 3.7만명으로 12% ↑ 중로아이존, 대기 아동 수 110명

서울시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조성한 '아이존'이 지역사회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부담 등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아이존 서비스 지원율은 2016년 5만3396명에서 2018년 5만9208명으로 10.88% 증가했다.

아이존은 정서·행동 문제나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치료를 지원해 증상 완화를 돕는 아동·청소년 주간 치료센터다.

시는 정서·행동 문제 아동 중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이 많다는 점을 반영해 지난 2006년부터 방과 후 주간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아이존에 대한 이용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의 '아이존 서비

서울시 아이존 서비스 지원실적

(단위:명)

구분	개별치료	집단치료	간접지원 및 연계	총 연인원
2018년	37629	20224	1355	59208
2017년	35937	16586	2693	55216
2016년	33598	16692	3106	53396

/서울시의회

스 지원 실적' 현황을 보면 개별치료를 받은 아동 수는 2016년 3만3598명에서 2018년 3만7629명으로 12% 늘었다. 같은 기간 학교적응 프로그램, 인지학습 치료, 놀이치료, 감각통합치료 등 집단 치료를 받은 아동은 1만6692명에서 2만224명으로 21.1%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는 높아지고 있지만 아이존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의회는 "보건복지부의 '아동·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 조사'를 보면 초·중·고등학교의 20% 이상이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으나 현재 아이존 정원은 328명에 불과하다"며 "시설 1개소당 이용 아동 정원은 31명 또는 40명인데 아동 1인당 평균 이용기간은

18개월로 중로아이존의 경우 대기아동(올해 9월 기준)이 110명이고 송파아이존도 17명이 대기 중이다"고 지적했다.

건물 임대료를 내지 못해 폐업한 곳도 있다. 시는 지난 2006년 송파아이존을 시작으로 노원, 동작, 양천, 동대문 등 서울시에 총 12개소의 아이존을 설치했다. 그러나 금천과 강서아이존이 건물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했다.

시의회는 "일부 아이존이 운영상 어려움으로 폐지된 바 있고 지금도 임대료 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시설이 있다"며 "아이존 시설이 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hki1@

공공건축물 공모... 종이 없는 '디지털'로

서울시는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전 과정에서 종이를 없애고 100% 디지털·온라인화하는 '디지털 공모'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돈의문박물관마을에 '디지털 심사장'을 만들었다. 설계공모 전용 홈페이지인 '프로젝트 서울'에서

설계공모 공고부터 건축가들의 참가등록과 실제 작품 제출이 이뤄진다. 홈페이지에 작품을 올리면 심사위원들이 심사장에서 화면으로 이를 검토하고 투표하는 방식이다. 시는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설계공모'의 2차 발표심사를 18일 공개심사로 진행한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출생아 수 8.8만명 전국서 '1위'

20년간 젊은층 인구 꾸준한 유입 많은 신혼부부·기혼자 수 등 영향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8만8000여명의 출생아를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젊은층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혼부부 수, 높은 기혼인구 비중 등이 출생아수를 높인 요인으로 풀이된다.

도는 지난해 도내에서 8만8175명이 출생,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출생아수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출생아수가 32만6822명임을 고려할 때 전체 출생아 10명 가운데 3명(27.0%)에 가까운 수가 경기도에서 태어난 셈이다.



경기도청

실제,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15세~49세 인구의 순 이동 추이를 보면 20년간 15세~49세의 '젊은층' 인구가 한해당 15만~20만명 정도 유입된 것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유일하다.

경기도는 젊은층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 현상이 '좋은 일자리'와 '주거환경'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서울시, 겨울대비 종합대책 나선다

서울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 도로사업소, 시설공단 등 33개 기관은 15일부터 4개월간 24시간 '합동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폭설, 한파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한다.

우선 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미세먼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시는 12월부터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함에 따라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량 운행 제한은 평일·토요일·공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이를 어길 경우 1일 1회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11월 15일 (금)
음력 : 10월 19일

수도권 날씨
3 ~ 13°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연천 1/14
동두천 1/14
가평 -3/10
양평 -1/11
용인 4/14
수원 4/14
인천 7/15
평택 1/14
백령도 11/13
파주 1/15
서울 3/13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